

정당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언론 보도 프레임에 대한 연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을 중심으로

이수범 | 인천대학교

김성학 | 중앙대학교*

한성준 | 중앙대학교*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각 정당의 대응 방식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통합진보당이 활용한 위기관리 전략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각 정당이 사용했던 차별적 전략들이 언론 보도 프레임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강조되는지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경선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통합진보당은 수정 및 사과 전략의 적절한 대응을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 나타난 이미지 회복 전략의 불일치와 계파 간의 갈등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사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의 도덕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문제삼는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였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당 내에서 벌어진 분열 및 갈등이나 정당에 대한 책임 귀인, 수습과 혁신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도하였다.

주제어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보도 프레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 김성학·한성준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임.

I. 서론

현대사회의 성장과 함께 조직의 규모도 거대화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조직은 기술에 의한 편익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존성 또한 높아져 기술과 자본 수준의 부재, 감소, 퇴보가 조직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의 거대화, 복잡화, 다양화로 인해 위험 요소 및 양상이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및 조직의 생존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및 위기극복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기관리는 개인 및 조직의 존립 및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이수범 외 2005).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도 복잡해지고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 및 집단은 위기관리를 통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통제력을 회복시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많은 학자들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직이 위기 상황에서 사용했던 전략들이 언론을 통해서 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TV 토론, 대변인 브리핑, 기자회견, 뉴스 기사 등 언론을 통해 생성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위기관리 전략을 연구한 사례들이 많았다(김관규 외 2007; 김영옥 2006; 2008; 이수범 외 2005). 하지만 이러한 언론 보도자료를 활용하게 될 경우 사건 이슈의 특정 속성을 강조하거나 덜 강조하여 내보내는 언론의 프레이밍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 이루어졌던 위기관리 전략이 언론의 보도과정에서 재구성되어 수용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보도 프레이밍에 대한 분석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지 회복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학적 접근 사례는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프레이밍 연구를 접목하여 위기관리 전략을 재조명하려는 시도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통합진보당과 정치적 진보 집단이 그 존립의 정당성을 위협받고 있다. 2011년 12월 창당한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함께 야권 연대를 모색하고 지난 제19대 총선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면서 진보정당 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총선 직후 곧바로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통합진보당은 창당한 지 채 반년도 안 되어 최대의 위기에 빠진 상태이다. 통합진보당이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해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고 여당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선부정 사건의 위기 상황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그러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오히려 위기 상황을 악화시켰고 타 정당이나 보수 단체들로부터 중복주의와 같은 경선부정 사건에서 파생된 다른 외적인 이슈에 대해서까지 공격받고 있다.

본 연구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기관리 전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을 둘러싸고 각 정당들이 사용했던 전략들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위기관리 전략이 과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절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각 정당이 사용했던 전략들이 언론 보도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강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차적 목표이다. 화자 혹은 당사자 중심의 위기관리 전략뿐만 아니라 언론에 의해 재구성되는 프레임을 조명함으로써 공중 중심의 영역까지 다루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위기관리 전략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어떤 조직이든지 항상 안정된 상태로 운영될 수는 없으며 조직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콤즈(Coombs 1999; 2001)는 위기를 조직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잘못 대처할 경우 조직의 내·외부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위기는 조직의 역사에서 직면하게 되는 특이한 상황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며 조직의 존립 목표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구체적(specific)이면서 예기치 않은(unexpected) 비일상적인(nonroutine) 사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Ulmer et al. 2007; 2009, 6). 조직에 위기가 찾아오면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던 조직 내부의 시스템이 갑작스런 변화를 겪게 되고, 조직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는 곧 조직과 공중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하지만 위기가 전혀 극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직이 얼마나 적절한 위기 관리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위기관리 전략은 위기 상황에 봉착한 조직이 전략적인 계획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사태로부터 발생하는 위협과 불확실성의 일부를 상쇄시켜 위기에 보다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체와 공중들 간의 대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위기로 인해 조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지는 종합적인 행위이다(Fearn-Banks 1996; 2005).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의 진원지가 된 개인이나 조직에서는 위기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방어 전략을 취한다. 때로는 이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거나 동조하는 진영에서 방어 전략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반면 위기가 발생한 개인 혹은 조직의 외부에 있는 공중들이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당사자들은 발생한 위기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위기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크게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설득적 공격(attack) 전략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이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이미지는 공격 대상의 명성이나 체면, 정체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송종길 2004). 특히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대 후보나 상대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해 설득적 공격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김관규 외 2007; 송종길 2004; Benoit 2002).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득적 공격의 전략은 크게 일반적 부정, 잘못된 행위의 강조, 행위의 책임성 강조로

나눌 수 있다. 공격 전략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행위와 그 행위를 한 주체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Benoit and Wells 1996).

한편 방어 전략은 공격을 받은 측이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거나 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방어 전략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석 틀은 베노이트(Benoit 1997; 2000)가 제시한 이미지 회복 전략 (image restoration strategies)이다. 베노이트는 공격을 받은 개인이나 조직이 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인, 책임의 회피, 공격성

<표 1> 설득적 공격 전략과 이미지 회복 전략

전략		내용
설득적 공격 전략	일반적 부정	상황이나 현실의 총체적 부정성을 강조 구체적인 근거, 증거 제시 없이 부정적 결과를 강조
	잘못된 행위의 강조	부정적 결과의 정도나 범위, 지속성, 현재성 또는 근시성을 강조 무고한 희생자의 발생을 강조 책무관련성을 강조 말과 행위의 불일치성을 강조 수용자와 관련된 잘못된 결과나 손상을 강조
	행위의 책임성 강조	행위의 의도성, 계획성을 강조 행위 결과에 대한 예측 및 인지가능성을 강조 유사한 행위의 과거 수행성 또는 반복성을 강조 잘못된 행위로부터 얻은 이득을 강조
이미지 회복 전략	부인(Denial)	단순 부정, 비난 회피/ 전가
	책임 회피 (Evasion of Responsibility)	도발·공분조성, 실행 불가능성, 사고, 좋은 의도
	공격성 축소 (Reducing Offensiveness of Event)	강화/ 지지, 최소화, 차별화, 초월, 비난자 공격, 보상
	수정 행위(Corrective Action)	잘못된 행위에 대한 수정을 약속
	사과, 굴욕(Mortification)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과

출처: 송종길(2004), p.114; Benoit(1997), p.179의 내용 재구성

축소, 수정 행위, 사과의 5가지 유형을 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의 정도가 낮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 등이 사용되지만 책임의 정도가 강한 범죄나 사고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거나 수정 행위를 약속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위기 상황의 전환에 도움을 준다(Coombs 1999/2001).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설득적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을 분석하여 정치 과정에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위기관리 전략이론에 대해 조명하는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김관규 외(2007)는 2006년 서울시장선거 텔레비전 토론에서 각 후보자들이 활용한 설득적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설득적 공격 전략의 측면에서는 일반적 부정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설득적 방어 전략의 측면에서는 단순 부정을 하거나 사건의 부정성을 축소하는 전략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지도에서 우위를 점한 후보들은 주로 방어 전략을 취하는 반면, 지지도에서 열세인 후보들은 우위에 있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격 전략을 주로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범 외(2005)의 연구에서도 베노이트의 이미지 회복 전략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공조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두 야당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하였다.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탄핵의 역풍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후 17대 총선에서 지지율 회복을 통해 약진한 반면, 민주당은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위기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두 정당 간의 이미지 회복 전략 구사의 차이에서 찾았다.

정당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위기에 맞서서 이미지를 회복하는 설득적 방어 전략만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기 상황을 이끌어가는 설득적 공격 전략도 이미지 형성에 개입한다. 이러한 관점은 김관규 외(2007), 송종길(2004)의 연구와 같이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로 발견된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과 같이 공식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가 한자리에 모이는 정치 이벤트에서는 입장과 견해 차이로 인해 후보자들 간의 충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송종길 2004). 따라서 후보자들의 발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공격 전략과 자신에 대한 방어 전략이 모두 나타나므로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합진

보당 경선부정 사건 역시 사건을 둘러싼 정치 지형과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사건에 대한 적극적 방어를 필요로 하는 통합진보당과 공세적 전략을 취하는 기타 정당 간의 대립 구도가 정당의 논평·브리핑 자료를 통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에 대해서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프레임 연구와 위기관리에 대한 언론의 보도

위기 상황의 구성 요소를 토대로 구체적인 반응 전략을 분석하고 제안하는 연구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수사학적 관점에서 제시된 전략이 위기 상황의 대처에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밝히는 연구 주제는 현재에도 위기관리 이론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슈이다. 수사학적 전략에 관한 연구는 화자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기 관리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김영옥(2006)은 수사학적 전략에 대해서 단순히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공중에 대한 효과만을 다루어 위기극복을 위해 시도하는 일방적인 설득 내지 탈출만을 설명한다는 오해가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에서 벗어나 수사학적 전략을 화자와 청중의 의미공유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도 수사학적 전략이 화자 중심의 초점을 지니고 있었기에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Lee(2004)는 청중 중심의 연구 즉, 수용자들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위기 반응 전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기 이슈에 관련된 사람이나 집단이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하는 수사학적 접근 방식의 연구가 위기대처 전략을 수립하고 그 효율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위기 상황의 정도, 위기 이슈에 사용되었던 전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접근 방식도 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확장과 전략의 효율성 탐구에 필요한 가치 있는 연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위기를 다룬 많은

사건과 이슈들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고 이를 수용자들이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프레임 연구를 접목시키는 방안이 많이 모색되고 있다.

프레임은 사건의 특정하고 특수한 측면이나 맥락을 부각시켜 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과 해석에 영향을 주는 도구이다. 엔트만(Entman 1993)은 프레임이 선택과 현저성(salience)을 포함한다고 보고, 소통하는 메시지에서 지각된 실제의 몇 가지 측면을 골라서 이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프레임은 어떤 특정한 문제의 정의, 인과 관계의 해석, 도덕적 평가, 처치의 권고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프레임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실재의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거나 덜 강조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정보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고 상황적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Hallahan 2011). 수용자들이 어떤 프레임을 접했는가에 따라 같은 주제나 이슈를 다르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 프레임 분석은 미디어가 메시지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또 수용자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인 것이다.

수용자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도구로써 프레임을 활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Entman 1993; Iyengar and Simon 1993; Scheufele 1999; Scheufele and Tewksbury 2007) 언론에서 뉴스 보도를 할 때 사용되는 프레임의 역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언론은 특정 프레임을 사용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으로 보도하며,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프레임의 차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Iyengar and Kinder 1987). 따라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언론 집단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뉴스에도 다른 보도 프레임을 사용할 것이고 이는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위기 상황의 보도에도 해당된다.

뉴스 보도 집단이 프레임을 통해 사회 현상을 어떻게 강조하는지에 따라 수용자의 인식이 변화한다는 관점은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수용자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제기되면서 그 전략이 어떻게 강조되어 보도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박은혜 외(2007)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된 전략과 언론에서 사용한 보도 프레임이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어 위기 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와 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

된 전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프레임의 과정을 거쳐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하였고 그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려는 연구의 시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된 전략과 언론 보도 프레임을 접목시킨 연구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화자 중심 방식과 청중 중심 방식을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해당 분야의 유의미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이끌어낼 것이다.

정치적인 갈등과 위기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과 그 보도 프레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정치적 이슈의 대립 구도를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따라 수용자의 인식 변화 및 지지 세력 형성,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이 갈등의 본질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청중의 관심과 흥미 유발을 목적으로 단순히 대립 구도만을 부각시키거나 특정 관점에 편향되어 일정 부분만 두드러지게 묘사한다면 이는 수용자로 하여금 지나친 단순화에 기인한 이분법적 접근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Neuman et al. 1992; 양정혜 2001; 이준웅 2009).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수용자를 설득하는 영향력을 훼손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와 그 과정에서 쓰이는 뉴스 프레임은 독자 또는 시청자의 현실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그러한 영향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위기관리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프레임 연구를 통해서 위기에 대한 언론 보도의 양태와 그 기능에 대해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이라는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당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들이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거치면서 공중에게 다르게 전달될 것이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프레임 연구를 접목시키고자 한다. 정당뿐만 아니라 언론도 정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프레임 연구를 연계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분석은 통합진보당이 사용하는 전략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사건 외적 요소 이슈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적합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을 정당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위기를 맞은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이 취하는 위기관리 및 이미지 회복 전략과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해 공격하는 진영이 취하는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사건을 둘러싼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국내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하여 각 정당(통합진보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취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 주요 일간지(조선일보, 한겨레신문)는 어떠한 보도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는가?
- 〈연구문제 3〉 국내 주요 일간지(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 보도 프레임을 통하여 각 정당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기사의 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통합진보당이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치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총선 직후 당내 게시판에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해 진행한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 모두에서 대리 투표, 중복 투표 등의 부정선거 정황이 있었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소스코드를 누군가 열어보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진상조사 위원회를 만들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당 내의 계파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위기가 전이되었다. 급기야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열린 5월 12일에는 양측 간의 폭력 사태가 일어나며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사퇴 압박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자(이석기·김재연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서 통합진보당에서는 이들을 제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등 보수 진영에서 이들의 중복주의와 주체사상파(주사파) 전력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원 사퇴를 종용하고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중복주의에 대한 논란으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3개 정당의 논평·브리

〈표 2〉 시기별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의 진행 과정(2012.04.20~2012.05.31)

날짜	주요 이슈
2012년 4월 2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 공식 제기
2012년 5월 2일	경선부정 의혹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 결과 발표
2012년 5월 10일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 개최
2012년 5월 12일	이정희 대표 공동대표직 사퇴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과정에서 폭력 사태 발생
2012년 5월 14일	유시민·심상정·조준호 공동대표 사퇴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위원장: 강기갑)
2012년 5월 16일	강기갑 위원장 비대위원 5명 발표 당권파는 자체적으로 '당원 비상대책위' 구성
2012년 5월 17일	민주노총,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철회 발표
2012년 5월 21일	검찰, 통합진보당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당선자 임기 시작

핑 자료와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을 다루는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 기사에 대한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3개 정당의 논평·브리핑 자료는 각 정당의 홈페이지¹⁾에서 추출하였으며 보도 프레임 분석을 위한 매체는 보수적 성향의 '조선일보'와 진보적 성향의 '한겨레신문(이하 한겨레)' 총 두 개 신문으로 선정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까닭은 두 언론사가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성향을 대표하고 이러한 대립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에 활용한 기사 중 한겨레의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 서비스인 '카인즈(www.kinds.or.kr)'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조선일보 기사는 카인즈 검색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조선일보 웹사이트(www.chosun.com)에서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통합진보당'을 입력했으며 검색 결과로 추출된 기사 중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기간은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2012년 4월 20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이며 신문 지면상에 게재된 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집과정을 통해 정당 논평·브리핑 자료는 통합진보당 74건, 새누리당 22건, 민주통합당 8건, 총 104건을 수집하였으며 언론사 기사는 조선일보 193건, 한겨레 165건, 총 358건을 수집하였다.

2) 분석 단위 및 분석 유목

본 연구에서는 통합진보당,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논평·브리핑 개별 자료와 조선일보·한겨레의 개별 기사를 내용분석의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로 설정하였다. 우선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에 대해 각 정당이 활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정당의 입장에 따라 설득적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위기의 진원지이자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경선부정 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기에 대한 방어 전략을 펼칠 것이다.

1) 통합진보당(<http://www.goupp.org/>), 새누리당(<http://www.saenuriparty.kr/>), 민주통합당(<http://www.minjoo.kr/>).

또한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당권파의 입장과 비당권파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권파 측이 발표한 논평·브리핑 자료와 비당권파 측이 발표한 논평·브리핑 자료(정당의 공식 입장도 포함) 간에도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반면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 진영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선부정 의혹에 대해 공격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는 이중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논평·브리핑과 민주통합당의 일부 논평·브리핑 자료에서 나타나는 위기관리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베노이트(Benoit 1997)가 사용한 이미지 회복 전략(image restoration strategies)을 활용하였다. 이미지 회복 전략은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인, 책임 회피, 공격성 축소, 수정 행위, 사과/굴욕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이수범 외(2005)의 연구에서는 5가지 유형과 더불어 '침묵(silence)'을 추가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침묵 전략과 기타 유목을 추가하여 7가지의 유형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하여 각각의 이미지 회복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부인 전략:** 경선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단순히 버리나 부정선거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외부의 누군가에 의해 경선 결과가 조작되었음을 주장해 책임을 전가시키는 전략
- **책임 회피:** 경선부정의 책임을 질 희생양을 만드는 전략, 경선을 공정하게 치를 능력이나 정보가 부족했음을 강조하는 전략, 경선부정이 발생한 것은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 경선부정에 이르게 했던 행동들이 결과와는 관계없이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전략
- **공격성 축소:** 통합진보당의 당권파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전략, 경선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전략,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차별화하려는 전략, 경선부정 사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는 전략, 통합진보당을 비난하는 진영을 공격하거나 통합진보당이 위기로 입은 손실보다 앞으로 얻게 될 보상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

- 수정 행위: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건을 수습하거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
- 사과, 굴욕: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경선 부정이 발생한 점을 사과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
- 침묵: 지나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사건이 심각하거나 사건에 대한 발언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언급을 피하는 전략
- 기타: 이상의 어느 유목에서 포함되지 않는 내용

또한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 사건을 공격하는 진영(새누리당 혹은 민주통합당)이 펼치는 설득적 공격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베노이트와 웰스(Benoit and Wells 1996)의 설득적 공격의 범주와 전략 틀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범주에 대한 통합진보당 공격 진영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일반적 부정: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이 총체적인 부정성을 띠고 있음을 강조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의 제시 없이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전략. 경선부정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측면에 대한 공격도 포함될 수 있다.
- 잘못된 행위의 강조: 경선부정으로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의 정도나 지속성을 강조하거나 경선부정 사건으로 발생한 문제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전략.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의 책무관련성과 언행의 불일치성을 지적하는 전략. 중앙위원회의 폭력사태의 부상자들과 같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했음을 강조하는 전략. 통합진보당의 사건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국민들에게 결국 피해를 주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전략.
- 행위의 책임성 강조: 비례대표 경선부정의 배후에 특정한 의도와 계획을 가진 이들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이번 경선부정 사건이 결국 부정적인 결말과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인지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나 주사파가 했던 과거의 행적을 지적하거나 그들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잘못된 행위로부터 그들이 얻은 이득이 무엇인지

를 강조하는 전략.

- 기타: 이상의 어느 유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

정당의 논평·브리핑 자료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정한 국내 주요 언론사(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프레임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프레임을 도출하는 방법은 크게 연역적 접근 방식과 귀납적 접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연역적 접근 방식은 기존의 선행연구에 이미 검증된 다양한 프레임들을 새로운 연구에 사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연구 대상으로부터 경험적인 새로운 시도를 통해 그 특성에 따라 만들 수 있는 모든 프레임을 발견해내는 방식을 귀납적 접근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Semetko and Valkenburg 2000). 귀납적 접근 방식은 경험적인 추출 과정을 통해서 프레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프레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분석 대상에서 나타나는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기사 프레임 분석을 위해 전반적인 내용을 우선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귀납적 방식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분석에 활용한 프레임들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정의내릴 수 있다.

- 경선 부정성 부각: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및 부정의 내용을 상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 당내 분열 및 갈등: 통합진보당 당 내에서 벌어진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 구도를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통합진보당 내에서 분열 및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 정당 책임 귀인: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및 부정의 책임을 정당 관계자 또는 통합진보당 전체에 돌리는 내용
- 당선자 책임 귀인: 정당하지 않은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선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함을 주장하는 내용
- 도덕성 및 이념 공방: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도덕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켜 통합진보당(혹은 당권파)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거나 이들의 과거 행적 및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는 내용

- 진보 정체성 차별화: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진행해 온 민주통합당 및 기타 야권 세력들이 통합진보당과 일정한 선을 긋거나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는 내용
- 수사권 남용 비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거나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
- 수습 및 개혁: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으로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쇄신, 개혁방안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과 쇄신 및 개혁에 대한 실제적인 노력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는 내용
- 기타: 이상의 어느 유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

3) 분석 절차 및 코더 간 신뢰도

코딩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2명의 대학원생이 수행하였으며 코딩 과정에서 불일치를 보인 항목에 대해서는 코더들이 지속적인 토의 및 합의 과정을 통해 훈련·숙지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측정을 위해 통합진보당·새누리당·민주통합당 논평 및 브리핑 전체 자료 104건의 약 15%에 해당하는 16건과 조선일보·한겨레 기사 전체 분석 대상 358건의 약 15%에 해당하는 55건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예비코딩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분석 유목에 대한 코헨의 카파(Cohen's Kappa)값을 살펴본 결과 정당 논평 및 브리핑 자료의 방어 전략 및 공격 전략이 .83, 언론 보도 기사의 프레임이 .84로 나타나 전체 자료 내용분석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정당 자료에 나타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분석 결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한 논평·브리핑 자료에서 나타난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에 대해 정당별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통합진보당의 논평·브리핑 자료를 당권파 측의 자료와 정당의 공식 입장 및 비당권파 측의 자료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표 3> 정당별 설득적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 비교

단위: 건, ()안은 %

		통합진보당 당권파	통합진보당 비당권파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합계
방어 전략	부인 전략	3(13.0)	1(1.6)	-	-	4
	책임 회피	4(17.4)	-	-	-	4
	공격성 축소	12(52.2)	14(23.0)	-	4(50.0)	30
	수정 행위	2(8.7)	34(55.7)	-	-	36
	사과/굴욕	2(8.7)	11(18.0)	-	-	13
	침묵	-	-	-	-	-
	기타	-	1(1.6)	-	-	1
방어 전략 합계		23	61	-	4	87
공격 전략	일반적 부정	-	-	-	2(25.0)	2
	잘못된 행위의 강조	-	-	9(40.9)	2(25.0)	11
	행위의 책임성 강조	-	-	13(59.1)	-	13
공격 전략 합계		-	-	22	4	90
합계		23	61	22	8	114 ^{주)}

주) 정당 논평·브리핑 자료는 총 104건이지만 통합진보당 일부 자료에서 복수의 방어 전략이 나타나 전체 분석 대상은 총 114건임

다. 분석 결과, 사건에 대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입장 차이에 따라 각각이 취한 설득적 방어 전략에도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의 경우 ‘공격성 축소’ 전략(12건, 52.2%)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대한 당내 혹은 당 바깥의 문제 제기에 대해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사건의 심각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며 최소화시키거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대표적인 당내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정희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당원을 주인으로 여기는 당이라면, 부끄러운 상황을 아무리 빨리 벗어나고 싶어도 당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당원 한 사람의 명예라도 헌 신짜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통합진보당 12/05/04)”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성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상규 당선자가 강기갑 원내대표가 제안한 비례대표 진퇴 문제에 대해 “위험한 발상(통합진보당 12/05/11)”이라며 공분을 조성하는 것은 책임 회피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당의 공식 입장 및 비당권파의 자료에서는 ‘수정 행위(34건, 55.7%)’를 약속하는 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심상정 당시 공동대표가 “재창당의 각오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통합진보당 12/05/03)”고 말한 내용,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에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도라도 국민 앞에 진보정치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야 함(통합진보당 12/05/14)”을 강조한 내용은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책임과 함께 쇄신 의지를 보인 수정 행위로 볼 수 있다.

통합진보당의 논평·브리핑 자료를 종합하면 당권파는 상대적으로 비당권파에 비해 ‘부인’, ‘책임 회피’, ‘공격성 축소’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당권파 쪽으로 향한 책임 공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비당권파는 당권파에 비해 ‘수정 행위’를 강조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사과/굴욕’ 전략도 당권파 측보다 더 많이 활용하여 경선부정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당내 부정적인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 새누리당·보수 언론의 공격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공격성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에 대해 “통합진보당 내부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원내

야당이 망가지기 바라는 해코지(통합진보당 12/05/24)”라고 비판하는 내용이나,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에 대해서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진보정당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통합진보당 12/05/22)”라고 주장하는 내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통합진보당과 이념적 성격이 다른 새누리당의 경우 분석 대상 22건 모두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격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행위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 13건(59.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강조’는 9건(40.9%)으로 나타났는데 행위 자체에 대한 강조보다는 정당 자체에 이미지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행위의 책임성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는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하여 “이정희 대표의 정계은퇴, 당 대표단 총사퇴,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 총사퇴,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새누리당 12/05/04)”를 주장하며 통합진보당이 책임을 져야함을 주장하고, 이정희 대표가 “전국운영위원회 권고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어 버리는 등(새누리당 12/05/07)”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사건을 종북주의 문제와 연관지으며 통합진보당 구성원에 대한 부정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이 올랐던 강종현 씨의 과거 간첩 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새누리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였음을 주장하며 만일 그가 국회의원 될 경우 “국민세금으로 그를 지원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새누리당 12/05/15)”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자료에서는 사안에 따라 방어 전략과 공격 전략이 양분되어 나타났다. 공격 전략의 경우 ‘일반적 부정’이 2건(25.0%), ‘잘못된 행위의 강조’가 2건(25.0%)으로 나타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의 이슈나 새누리당의 공격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에 동조하며 ‘공격성 축소(4건, 50.0%)’의 방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적으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을 공격·비판하는 내용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히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민주통합당이 언급했을 때 자칫 야권연대 형성에 대한 명분이 약화되어 반대 진영으로부터 쉽게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

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기상황에서는 정보의 공황현상이 나타나 개인이나 조직은 일단 정보를 감추려고 하는 속성을 보인다(김영욱 2002; 2008).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공황상태는 공중이나 이해당사자의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고 조직이나 개인의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위기상황이 나타났을 때 신속한 대응을 강조한 것(Hermann 2008)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위기관리 전략을 살펴보면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비례대표 경선부정에 대해 ‘부인 전략’을 취하는 대신 신속한 사과를 하고 진상조사 등의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통합진보당 12/04/20) 위기관리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반 이후의 통합진보당의 위기관리 전략은 초반에 비해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콤즈(Coombs 1999; 2001)의 논의와 같이 위기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의 정도가 낮은 경우 부인이나 책임 회피의 전략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만, 조직의 책임 정도가 높은 경우 사과나 수정 행위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설득적 방어 전략은 상이하게 나타났고 다소 통일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당권파의 경우 경선부정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의 정도를 인식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수정 행위를 약속하거나 경선부정에 대해 사과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는 콤즈의 이론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당권파는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거나(통합진보당 12/05/08; 12/05/10),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끊임 없는 도덕성·이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논란에 대한 직접적 해명을 피하려는(통합진보당 12/05/07; 12/05/11)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이나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이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조직의 책임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이러한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김영욱 2008). 이러한 점을 볼 때, 논평·브리핑 자료를 통해 보여 준 당권파의 대응은 통합진보당

위기관리 전략의 효과를 반감시켰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립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초기의 적절했던 위기관리 전략이 다음 단계로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냈고 외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인식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2. 언론사 기사별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한 보도 프레임 분석 결과

언론사별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대해 어떠한 보도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론사별 보도 프레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와 진보 신문인 한겨레간에 사용하고 있는 보도 프레임의 빈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109.354$, $df=8$, $p<.001$).

조선일보의 경우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해 ‘도덕성 및 이념 공방(70건, 36.3%)’ 프레임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정당 책임 귀인(34건, 17.6%)’ 과 ‘당내 분열 및 갈등(33건, 17.1%)’ 프레임의 활용이 뒤를 이었다. 경선부정 사건 자체의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통합진보당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진보당에 책임을 귀인하거나 통합진보당 내부의 분열 및 갈등, 도덕성이 추락한 모습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주요 기사를 살펴보면, 한 당원의 게시판 글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님(조선일보 12/04/23)”을 지적하거나 ‘뿌리깊은 선거부정’, ‘관행’, ‘부정 백화점’ 등 도덕성 흠결을 지적하는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다. 특히 ‘주사파’, ‘NL계’, ‘경기동부연합’ 등 통합진보당을 중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단어들 많이 사용되어 통합진보당 사건의 양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를 이념 논쟁으로 촉발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이념 논쟁은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으로도 이어져 그들이 통합진보당과 결별하고 “정책적 차별화의 길로 가야 한다(조선일보 12/05/03)”고 역설하고 있다.

반면 한겨레의 경우 ‘당내 분열 및 갈등(59건, 35.8%)’ 프레임의 활용이 가장

〈표 4〉 언론사별 통합진보당 사건 보도 프레임에 대한 비교

단위: 건, ()안은 %

	조선일보	한겨레	합계
경선 부정성 부각	13(6.7)	16(9.7)	29(8.1)
당내 분열 및 갈등	33(17.1)	59(35.8)	92(25.7)
정당 책임 귀인	34(17.6)	21(12.7)	55(15.4)
당선자 책임 귀인	20(10.4)	6(3.6)	26(7.3)
도덕성 및 이념공방	70(36.3)	8(4.8)	78(21.8)
진보 정체성 차별화	9(4.7)	-	9(2.5)
수사권 남용 비판	2(1.0)	20(12.1)	22(6.1)
수습 및 개혁	5(2.6)	31(18.8)	36(10.1)
기타	7(3.6)	4(2.4)	11(3.1)
합계	193	165	358

 $\chi^2=109.354$, $df=8$, $***p<.001$

많았고, ‘수습 및 개혁(31건, 18.8%)’, ‘정당 책임 귀인(21건, 12.7%)’ 프레임의 활용이 뒤를 이었다. 한겨레도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취하면서 총체적인 부실·부정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조선일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진보언론인 한겨레가 ‘당내 분열 및 갈등’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특징은 경선부정 사건과 통합진보당 내부의 모습에 대해 심층 조명하려 한 결과임과 동시에 통합진보당 내 계파 간의 갈등으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거나 당내 구성원들이 유기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등 위기 관리 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또한 한겨레가 ‘당내 분열 및 갈등’ 프레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당내 위기상황에 대해 외부 공중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비해 ‘수습 및 개혁’ 프레임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여 통합진보당의 개혁 의지나 진보 정당의 희망적인 측면, 향후 진로를 모색하는 내용이 상당 부

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겨레가 조선일보에 비해 ‘수사권 남용 비판’ 프레임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난다. 한겨레의 ‘수사권 남용 비판’ 프레임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5월 21일 이후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수사권의 남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통합진보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논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새누리당이나 진보 정당의 야권 연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빌미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서는 “수사권 남용”, “정치적 판단의 작용”, “무리한 개입”, “민주주의 훼손 행위” 등(한겨레 12/05/22; 12/05/23)의 표현이 사용되며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띠었다. 반면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수사권 남용 비판’ 프레임은 거의 활용하지 않았으며 통합진보당의 비도덕성을 강조하며 ‘경선 부정성 부각’, ‘도덕성 및 이념 공방’, ‘당내 분열 및 갈등’ 등의 다른 프레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조선일보와 한겨레 모두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책임 귀인보다는 정당 전체에 대한 책임 귀인에 상대적으로 집중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의 총체적인 위기를 부각시키는 보도를 했다. 한겨레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세히 다루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검찰 등 수사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보 진영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을 비중 있게 다루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한겨레에 비해 정당과 당선자에게 책임 귀인을 많이 함으로써 진보 진영의 도덕성 문제가 고질적임을 지적했고, 이를 중북주의 등 이념 논쟁으로 확장시켰다. 더 나아가 민주통합당에게도 경고함으로써 야권 연대의 해체를 유도했다. 하지만 정작 비례대표 경선부정이라는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는 두 신문 모두 심도 있는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일보의 경우 총선 이후 대선 국면을 앞두고 진보 진영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을 강하게 드러내고, 한겨레는 진보 진영의 전반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부도덕성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을 꺼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사건의 본질이나 사실로부터 많이 벗어난 보도를 했고, 한겨레는 갈등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통합진보당 비례대

표 경선부정에 대한 두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나 본질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정파적 이해관계, 이념 논쟁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3. 통합진보당 사건 뉴스 보도 프레임과 정당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비교 논의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과 관련한 정당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언론사가 활용한 뉴스 보도 프레임의 분석 결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당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언론사 뉴스 보도 프레임을 비교하여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을 둘러싼 통합진보당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한 공중(혹은 수용자)의 이해와 해석의 측면까지 다루어 보겠다.

우선 조선일보의 보도 프레임과 통합진보당의 위기관리 전략을 비교하고자 한다. 통합진보당은 비당권파와 정당 공식 입장의 차원에서 사건 수습을 위해 수정 행위 전략과 사과/굴욕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쇄신책 마련과 신뢰 회복의 의지를 논평·브리핑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힘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수습 및 개혁’ 프레임을 5건(2.6%) 사용하는 데 그쳐 그러한 내용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내에서 일어난 갈등의 측면을 부각시키고 정당이나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책임을 귀인하는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당권파는 진상조사 결과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격성 축소에 만 급급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보수 언론이나 새누리당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전략으로서는 적절하지만 역설적으로 갈등을 부각시키고 책임성을 강조하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정하는 셈이 되었다. 이와 함께 당권파가 경선부정 진상조사에 대한 부인과 책임회피 전략을 활용하고 이러한 내용이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됨으로써(조선일보 12/05/03; 12/05/05; 12/05/07) 독자들이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비례대표 경선부정으로 드러난 통합진보당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이를 진보 세력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확장시켰다. 2012년 5월 9일자 기사(곽노현·김용민·이석기·김재연 사퇴란 없는 도덕 불감증)에서 진중권 교수의 “도덕불감증이 진보·개혁세력에게는 치명적 질병”이라는 트위터 글을 인용해 보도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더불어 종북주의와 같은 이념 노선에 대한 문제제기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일보는 도덕성과 이념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보도를 하였고 상대적으로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당내 해결 과정에 대한 뉴스에는 소홀하였다. 또한 5월 22일에 이루어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종북주의 전력이 있는 정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논조를 펼쳤다. 이에 반해 통합진보당이 주장한 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나 수사권의 지나친 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를 주로 접하는 독자들은 통합진보당의 사건 수습 과정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진보 세력의 이념적 정체성이나 존재의 정당성 등의 문제에 더 큰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한겨레의 보도 프레임과 통합진보당의 위기관리 전략을 비교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겨레는 통합진보당 내부의 갈등 및 대립 구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한겨레 12/05/05; 12/05/07) 사건에 대한 정당 전체 차원의 책임귀인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조선일보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던 국회의 원 당선자에 대한 책임귀인이나 도덕성 및 이념 공방의 문제에 대해 한겨레는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한겨레의 보도를 통해서 독자들은 정당 차원의 책임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 수 있는데 이때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 및 사과를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한 비당권파의 대처는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공격성 축소를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한 당권파의 대처는 그렇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겨레의 보도는 진보의 가치 편중이 일어나서 새누리당이 내세운 공격 전략과 조선일보가 사용한 보도 프레임의 내용과 불일치하였다. 이러한 불일치는 독자가 사건과 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사실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

한겨레는 사건 수습 및 개혁을 강조하는 보도 프레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수정 및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한 비당권파의 입장과는 동일하였으나 당권파의 입

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당권파가 진보 언론 및 진보 진영과 소통을 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그리고 한겨레는 검찰의 압수 수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권 남용 비판을 강조하는 보도 프레임을 많이 사용(한겨레 12/05/22; 12/05/23)하였는데 이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격성 축소 전략을 많이 구사했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독자들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진보 진영이 규탄하는 수사권 남용에 동의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대해 각 정당의 설득적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을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한 국내 주요 언론사(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프레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언론 보도 속에서 통합진보당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논평·브리핑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당권파의 입장과 비당권파·정당 공식 입장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당권파의 경우 당 내부 혹은 외부에서 경선부정 사건의 책임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공격성 축소 전략을 사용하며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비당권파나 정당의 공식 입장은 경선부정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사건에 대한 수습책 마련 및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보수 언론이나 새누리당의 공격에 대해서는 공격성 축소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공격성 축소 전략의 빈도는 수정 행위 전략의 빈도보다는 적었지만 비중 있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쟁이 일상적으로 오고가는 정당 간의 커뮤니케이션 모습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직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직의 책임성 정도가 높은 사안인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정당의 적절한 위기관리는 부인이나 책임 회피, 공격성 축소보다는 수정 행위나 사과 전략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선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발표된 통합진보당의 초기 대응 전략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에 벌어진 통합진보당 내 계파 간의 갈등과 중앙위원회의 폭력 사태 등의 국면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통합진보당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의 도덕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문제삼는 프레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경선부정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책임을 묻는 프레임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및 이념 공방’ 프레임을 많이 활용하면서 조선일보는 경선부정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도하기보다는 진보 진영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거나 이념 논쟁을 증폭시키는 용도로 활용하였다. 반면 한겨레는 경선부정 사건 보도에 좀 더 집중하면서 당 내에서 벌어진 분열 및 갈등이나 정당에 대한 책임 귀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도하였다. 동시에 통합진보당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수습·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검찰의 지나친 수사권 남용이나 보수 진영의 색깔론 공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언론 보도 프레임과 통합진보당의 위기관리 전략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뉴스 수용자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선일보에서 주로 강조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책임 귀인이나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책임 귀인 프레임은 이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공격성 축소 전략과 맞물리게 된다. 또한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파생된 이념 논쟁이나 도덕성 공방에 집중하거나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당화하는 논조를 펼치면서 조선일보를 주로 접하는 독자는 통합진보당 혹은 진보 진영이 전달하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조선일보 혹은 새누리당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보 진영의 부도덕성이나 종북주의 등의 이념 공방에 더욱 주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겨레의 보도에서는 조선일보에서 주로 나타났던 당선자 책임 귀인이나

도덕성 및 이념 공방의 프레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당내 갈등 상황이나 통합진보당 전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한겨레 독자들은 정당 차원의 책임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당권파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겨레 보도는 ‘수습 및 개혁’ 등 진보적 성향에 집중한 프레임을 활용하여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의 논조와는 정반대의 시각에서 보도하였고 뉴스 수용자들 역시 한겨레의 보도 방향에 따라 사안을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은 한겨레에서 주로 보도하는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 내용을 접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당 차원에서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었다. 통합진보당 역시 19대 총선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여 민주적 절차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자 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비리·부정으로 인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진보진영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천 비리와 정파 간 갈등, 특정 세력의 패권주의를 그대로 노출시켰으며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정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당위기를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다(조현연 외 2012; 한정택 2012). 게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당뿐만 아니라 언론도 정파성을 드러내며 공중에게 정당의 전략을 보도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위기대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 정당의 미래 이미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 어떠한 설득적 공격 전략과 방어 전략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단일한 위기관리 전략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조직의 설득적 공격과 방어 전략 모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뉴스 보도 프레임이 수용자들의 사건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의거하여 국내 주요 일간지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보도 프레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각 정당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언론사의 보도 프레임을 비교 논의하여 각 정당의 전략들이 신문의 보도 프레

임과 어떻게 다르고 또 그 차이로 인해 수용자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논의하였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당사자들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외부 공중 수용자들의 인식까지 연구 범위에 포함시켜 통합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다만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분석 기간(약 40일) 동안 발표된 각 정당들의 논평·브리핑 자료 수가 충분하지 않고 정당별로 편차가 커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논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론 도출보다는 사건의 맥락에 따른 해석과 의미 부여를 적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위기상황이 해결되는 시점에서는 후속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상황과 정당의 전략, 언론사의 보도 프레임의 특징이 되는 속성들을 비교해서 분석하였기 때문에 미시적인 논의를 세밀하게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당 자료와 기사의 수가 풍부해지면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단위를 더 작게 하여 문단 혹은 취재원 인용구로 설정하거나 분석 유목을 더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건을 위기의 단계에 따라 나누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뉴스 보도 프로그램의 변화를 분석해 본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건에 대한 정당별 논평·브리핑 자료와 언론보도 프레임에 대한 내용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따라서 정당의 논평·브리핑 자료와 언론보도 프레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수용자의 인식을 선불리 예측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어 연구자들의 추론으로 한정짓고자 한다. 정당의 논평·브리핑 자료와 언론보도 프레임의 내용분석을 기반으로 한 수용자의 인식의 측정은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위기상황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전략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라보는 수용자들과 연관이 있는 뉴스 보도 프레

임을 분석하여 둘 간의 통합적 비교 논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정당 이미지의 변화나 수용자의 인식 차이를 규명하는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 추가된다면 보다 일반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적 공격 및 방어 전략 이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관규·박연진. 2007. “TV토론에서의 후보 지지도와 토론 포맷에 따른 설득 전략의 차이: 설득적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권 3호: 47-87.
- 김영옥. 2002. 『위기 관리의 이해』. 서울: 책과길.
- _____. 2006. “공격과 방어의 수사학: 황우석 사건 위기 커뮤니케이션 분석.”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5-32.
- _____. 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현대 사회의 위험, 위기, 갈등에 대한 해석과 대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박은혜·김영옥. 2007. “언론 프레임과 이미지 회복 전략이 공중의 위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8호: 73-118.
- 송종길. 2004. “2002년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토론에서 나타난 수사학적 토론전략 연구: 후보자의 설득적 공격과 방어전략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108-137.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이수범·김수정·김유훈·정수아. 2005. “정당의 위기관리를 위한 이미지 회복 전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9호: 189-231.
- 이준웅. 2009. “뉴스 틀 짓기 연구의 두 개의 빨.” 『커뮤니케이션 이론』 5권 1호: 123-166.
- 조현연·김정훈. 2012. “진보정치의 위기와 진보의 재구성: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통권 95호: 94-127.
- 한정택. 2012. “제18대 국회 평가: 정당 매니페스트를 중심으로.” 『현상과인식』 통권 116호: 63-89.
- Benoit, W. L. 1997. “Image Repair Discourse and Crisis Communication.” *Public Relations Review* 23(2): 177-186.
- _____. “Another Visit to the Theory of Image Restoration Strategies.” *Communication Quarterly* 48(1): 40-43.
- _____. 2002. “A Functional Analysis of the 1988 Bush-Dukakis Presidential Debates.” *Argumentation and Advocacy* 38: 219-233.

- Coombs, W. T. 저. 이현우 역. 1999/200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Fearn-Banks, K. 저. 최양호·이명천 역. 1996/2005. 『위기관리 PR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Hallahan, K. 2011. "Political Public Relations and Strategic Framing." In J. Strömbäck, & Spiro Kiousis (eds.), *Political Public Relations: Principles and Applications* (pp.177-213). New York: Routledge.
- Hermann, C. F. 2008. "Some Consequences of Crisis Which Limit the Viability of Organizations." *Crisis Management Volume II*: 210-224.
- Iyengar, S., and D. B. Kinder. 1987. *News that Matt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and A. Simon.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 Lee, B. K. 2004. "Audience-oriented Approach to Crisis Communication: A study of Hong Kong Consumers' Evaluations of an Organizational Crisis." *Communication Research* 31(5): 600-618.
- Neuman, W. R., M. R. Just, and A. N. Crigler. 1992. *Common Knowled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 Scheufele, D. A., and D. Tewksbury. 2007. "Framing, Agenda Setting, and Priming: The Evolution of Three Media Effects Models." *Journal of Communication* 57: 9-20.
- Semetko, H. A., and P. M. Valkenburg.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Ulmer, R. R., T. L. Sellnow, and M. W. Seeger 저. 최양호·이명천 역. 2007/2009. 『위기 커뮤니케이션: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었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ABSTRACT】

**A Study on the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of Party and News Framing:
Focusing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llegal Election
i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Lee, Soo Bum |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University of Incheon

Kim, Sung Hak |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Han, Seong Jun |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strategy which looked into the method of reaction of each political party related to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llegal election i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e then examine whether the discrimina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which each political party used were differently emphasized as any kind of way by news fram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performed proper reaction such as corrective action and mortification immediately after the suspicion of illegal election had emerged. However, the inconsistency of image restoration strategies and conflicts between two opposite factions i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rather prevented to overcome the crisis. The analysis of news framing shows that Chosun newspaper focused on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s immorality and the problem of ideological identity. On the other hand, Hankyoreh newspaper emphasized conflicts in the party, responsibility attribution to the party, and reforming the party.

Key Words |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news fram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llegal election